



임희섭

고려대학교 교수

사회자: 오늘 좌담회 주제는 삶의 질, 새로운 인식과 실천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삶의 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점차로 경제계 쪽에서

서도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경제 신문에 칼럼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기거서의 요점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볼 때도 세계 선진국에 가깝고 어떤 경제 지표에서는 세계 10 개국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 생활의 물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세층의 사람들이 삶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까지 가는 과정부터 하루가 전쟁같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 또는 운전사들 두

고 뒷자리에 앉아서 점장계 출근하는 사람 한 것없이 모두가 교통 문제로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보면, 어린애를 낳아서 기를 때 불과 대여섯살 되면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는데, 유치원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공 유치원 같은 곳은 경쟁률이 4 대 1이니 5 대 1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미술 교육이니, 피아노 교육이니 하면서 학교에 다녀와서 계속 학원으로 쫓아다녀야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에 가면 과외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도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의 1/3 정도는 장기 론(loan)과 본인의 아르바이트로 해결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고 졸업시킨 후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상당히 많은 결혼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국에서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고, 교회에서 가까운 진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간단히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 어느 통계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는 데 8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데 평균 8 년이 걸리니까 10 년, 15 년 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집을 마련하는 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관청에 가보면 인허가를 받는 데도 힘듭니다. 심지어 운전 면허를 따려면 몇번씩 신청하고 기다리고, 몇번씩 떨어지면서 운전 면허를 따야 합니다. 경제 지표 상으로 우리는 선진국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양적·질적인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복지 의식도 높아야 한다는 시점에 우리 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상 생활의 문제를 바탕으로 삶의 질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정로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정로 교수: 우리나라에서 최근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歐美에서는 60년대를 전후하여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환경·도시·빈곤·인권 문제 등이 표출되면서, 경제적 여

건의 향상이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 전반의 복리와 행복의 증진으로 귀결되리라는 종래의 가정에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회 지표(social indicators) 조사 결과에 의하면, 5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도 상승하는 반면, 60년대 이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OECD는 70년대부터 경제 성장과 동시에 갖추어야 할 다양한 사회·복지·정치제도를 연구하고, 회원국들의 경제 외적인 삶의 질-교육 및 의료 혜택, 복지 및 공공 시설, 정치적 자유 등-을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歐美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중심적 사회 발전 논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제기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60년대 이후 사회 여러 부문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경제 성장 일변도의 논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사회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조직 원리, 운영 체계가 요구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질'이란 용어가 학계는 물론 정치인, 관료, 기업가, 대중 매체 등에서 즐겨 사용되고는 있지만, 명확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연하게 어떤 바람직한 삶의 모습 정도로 각기 다른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

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삶의 질' 연구를 진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포괄적인 개념 규정보다는 특징의 것과 관련된 경험적 측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인 환경, 교통, 경제, 정치 등과 아울러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평가인 성취감, 행복감, 인간 관계 등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지표는 양자들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질'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일상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질' 개념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사로잡았던 사고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근대화, 선진 사회 등의 이데올로기 동원 속에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은 무시한 채 도구적이고 가시적인 물량 지표의 확대에, 개인의 복리와 일상적 삶은 무시한 채 거대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그리고 지역적·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은 무시한 채 일률적 중앙 집중화에 치중하면서 익숙해진 우리의 관념과 제도, 관행에 보다 냉철한 인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 소득 1만 달러', '세계 15위의 GNP 규모', '세계 7위권의 기술 선진국', '세계 10대 교역국', '세계 최대...', '세계 최초 ...' 등의 구호와 잣대로 사회 발

전의 수준을 가늠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질'은 그 내용과 기준에 있어서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상대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삶의 질'의 의미와 내용, 실현 방안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윤곽을 그려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도에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성인들은 자신의 '삶의 질' 결정 요인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가족·친구·동료들과의 좋은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자유 시간 확보에 대하여는 상당히 낮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긴 노동 시간을 가진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한 복합적이며 심층적인 탐구와 광범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현실 적합성을 가진 '삶의 질' 개념은 그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누구보다도 정부, 시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위한 공공 복지 투자가 경제 개발이나 생산적 투자와 제로 선(zero-sum)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은 총체적인 사회 개발로서 노동 생산성의 제고와 사

회 통합의 기반을 제공하는 적극적 의미의 생산적 투자이며, 공공 복지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적 삶과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제반 문제가 '삶의 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인식이나 부적절한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주택의 소유 여부가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일차적 요인으로 부상할 만큼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유럽에서 공공 복지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온 영역을 도외시하였던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이 큼니다.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환경 영향의 평가가 오히려 환경 파괴의 면죄부 노릇만 한다는 비판에서도 드러나듯이, 환경을 비롯한 새로운 공공 복지 영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 방식은 크게 우려할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적·객관적 조건의 조성에는 정부가 앞장서야 하지만, 생활 현장 속에서 '삶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요구하며 행정 의존형 서비스의 분가피한 공백을 채우는 역할은 시민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가진 공해 도시에서 70년대 이후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는 쾌적한 선진 도시로의 탈바꿈에 성공한 일본 도쿄(東京) 근교 가와사키(川崎)시의 지역 사회에 대한 3년간의 조사 연구에서 느낀 바는 이것입니다. 일상적 '삶'의 터전인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 생활'과 '지

역' 차원의 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하는 시민의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현재 가와사키市 사회 교육 관련 행정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도보 가능한 거리 내에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질 높은 삶의 욕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시민관 분관의 설치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1987년에 개관된 최초의 분관 건립은 해당 지역 소학교의 사친회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주부들의 자주 학습 모임을 주축으로 10여 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열성적이고 끈질긴 노력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은 정부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계 각종 특히,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이런 시민들의 새로운 인식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 통로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원 활동과 시민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원 활동은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과정을 통한 자각과 자기 발전·자기 변혁의 과정으로서, 공공 차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실천은 바로 자신의 삶의 질 향상 조건으로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책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사적 이윤 추구를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公共 善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최대 수혜자로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된 대기업은 사회적 기여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봅니다. 기업의 비영리 봉사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지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 이윤 실현과 기업 존재 가치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보장한다는 적극적 투자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은 앞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할 당위성과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의 사회 기여 활동은 기업의 주관 하에 기업의 이름을 내걸고 즉각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사업 수행 방식보다는, 독립적인 공익 재단(미국의 카네기재단,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등)이나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기업 재단을 통하여, 일단 기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를 여과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사회 기여 활동은 다른 재단이나 기업과의 정보 교류를 통하여 사업 영역과 구체적 프로젝트를 조정·분담·전문화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모기업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분야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회 기여 활동인 기부·자원 활동 등의 지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수의 외국 기업에서는 매칭 기프트(matching gift)와 시간 및 기금 지원 등 직원의 사회 봉사 활동을 고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반감의 증대에 대응하여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앞다투어 기업 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대충 말씀하신 요점은 먼저 삶의 질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을 잘 정리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삶의 질 향상 과제와 프로그램을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이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실 적합성을 갖도록 구체적으로 개발·실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시민, 기업의 역할을 논하셨는데, 세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히, 대기업 쪽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부터 삶의 질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교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질의 배경이나 개념과 관련해서 보완하거나 추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념, 배경하면 가장 원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황경식 교수님부터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서울대학교 교수

황경식 교수: 윤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윤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서양에서 삶의 질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그 문제를 절실하게 느껴서 그런지 아니면 흉내를 내고 있는지는 몰라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의미하는 백락이라든지 개념에 대한 논의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윤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경제 개발이라든지 성장 일변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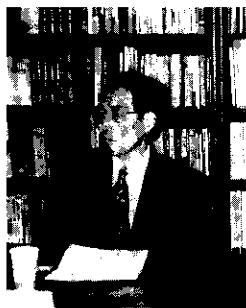
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속에 이 문제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삶의 양적 팽창과 상당히 관련된 단순한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 뿐입니다. 윤교수님께서서는 양쪽을 다 말씀하셨지만 좀 주체적인 쪽의 예를 들면, 철학적으로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경험 내지는 살아가는 주체가 느끼는 것과 관련되는데, 대부분 중요시되지 않고 삶의 조건 또는 물적인 토대에 아직도 얽매어 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이라기 보다는 삶의 조건이라든지 삶의 질의 반쪽 정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것과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라든지 삶의 질을 규정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보다 많이 분체시 되어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주체적인 계기를 좀 강하게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 딜레마는 아직도 우리가 성장 이데올로기를 버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그래서 성장 이데올로기와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어떤 택일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성장과 복지나 삶의 질 또는 삶의 양적 팽창과 질적 고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고민을 갖고 있으며, 선진 제국과는 달리 '삶의 질'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부담으로 느끼는 주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정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이 논의되는 배경이 지나친 경제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해온 데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 발전의 추구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치유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짧은 기간 내의 경제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는 서구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추구되어왔고, 그 이데올로기도 대단히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정통성이 약한 군사 정부에서는 성장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했고, 또 그때 그때의 어떤 경제 지표나 목표를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내놓고 이것을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유난히 심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 부작용도 그만큼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더 절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 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진 교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 성장 일변도의 국가 정책, 수출제일주의 경제 정책의 수행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한 경제 정책의 수행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



이정진 _____
서울대학교 교수

다. 예를 들면, 환경 파괴적인 수출 산업을 위주로 한 빠른 경제 성장의 추진은 우리의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켰고, 경제 성장 일변도의 국가 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국 우리 삶의 질 또는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빈번히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삶의 질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경제 성장과 생활의 질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삶의 물질 토대 마련이니 물질적 풍요의 증진이니 해서 순전히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고, 질적인 변화는 희생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분명히 정의해야 하겠지만, 방금 윤교수님과 황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든 생활의 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다양한 느낌이나 체험, 성취감, 행복감 등 개인의 주

관적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바로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바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복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할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옷이란, 그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고 추위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한두 벌 혹은 서너 벌로 족합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1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옷의 종류도 많아지고 디자인도形形色색으로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질의 의복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일년에 한 두 번 입을 까 말까 한 옷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골라 입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옷을 통해서 개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복에 있어서의 질적 다양화·고급화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다양하고 섬세한 느낌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보아 오늘날 각 가계의 의복비 지출에서 물리적 필요 즉, 신체의 보호와 추위를 막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은 아마도 10%도 안되고, 나머지 90%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섬세한 느낌이나 행복감, 개성 발휘 등을 위한 지출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의복 질의 다양

화·고급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고 고급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외식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엔젤지수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가계의 음식비 지출 중에서 순전히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음식비의 비중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1인당 국민 소득 500 달러 시대와 달리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에는 우리 가계에 있어서 음식비 지출액 중 아마도 극히 일부만이 생리적 욕구를 위한 부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맛을 즐기기 위한 지출, 친척이나 친구들 또는 이웃들과 같이 담소하고 같이 즐기기 위한 지출, 또는 좀 더 거창하게 말해서 음식 문화를 즐기기 위한 지출입니다. 한 20 년전만 하더라도 예컨대, 장국밥, 비빔밥, 만두, 냉면, 불고기 등 온갖 음식을 한꺼번에 파는 잡화상 식의 음식점이 인기가 있었습디다만 요즘은 예컨대, 냉면을 잘 하는 음식점, 생선 초밥을 잘 하는 음식점, 만두를 잘 하는 음식점 등 전문화된 음식점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보다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증거이며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음식 문화의 발달이 또한 곧바로 경제 성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곧 경제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식 문화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라는 것과 삶의 질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계의 가장 기본이라는 **의**와 **식**에서 질적 다양화 내지는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경제 성장 그 자체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경제 성장이 없다고 해서 삶의 질의 향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삶의 질을 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삶의 질에 대한 정의가 좀더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겠지만, 경제 성장을 순전히 양적 팽창 또는 물질적 토대의 팽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황경식 교수: 이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해결책을 말씀하셨듯이, 양과 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팽창이 극대화되면 질적 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적으로 어느 정도 팽창했기 때문에 질적 비약을 생각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한다면, 둘은 분명히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뭔가 지금과는 달라야 되겠다는 의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양과 질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서로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양에 치중을 하다보면 질이 희생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을 위해서 정치 권력이 집중된다거나 정치적 민주화가 후퇴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사회적인 삶이나 자유로운 의사 표시, 또 다양한 참여 같은 것의 후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 택일이나 윤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긴장이나 갈등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방 후의 양적 성장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육이 경제를 앞지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을 전공하시는 문교수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린.....
서울대학교 교수

문용린 교수: 21세기 위원회나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우리 삶의 질 문제를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상균 교수라고 저와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전 교수님과 황경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저희는 욕구 지표와 통합 지표로 나눠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 통합 지표 상의 안전감 또 불평등 지표인 지니 계수 상의 똑같은 봉급쟁이로서 불평등감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지수의 객관적 추출이 가능하다면, 이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잴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욕구 지표의 예를 들면, “나는 커피 아이스크림을 꼭 먹고 싶는데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커피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외국에 나가면 싹껏 먹고 들어온다”, “먹고 싶은 과일이나 음식, 입고 싶은 옷 등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있어서 나가면 사온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비 생활에서도 “나는 쓸 돈이 있는데도 마음에 드는 걸 살 수가 없다”는 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중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독립적 변수로서 설명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정도로 분명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의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에서의 어떤 행복감·안전감같은 것을 측정하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德目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과는 전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덕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이나 자유같은 것은 경제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별개의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집착하고 추구해왔던 덕목이지만 경제 발전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두 가지 덕목은 사랑과 자유였던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가 완비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됐다고 하면서도 해만 지면 밖에 나가지 못하는 도시가 대다수 아닙니까. 자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 발전이 그만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차원에서는 과거 200년 전 즉, 쌍권총을 차고 다닐 때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곡간에서 인심나듯 나누며 살 줄 알았는데, 사람과 사람들간의 사랑 차원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사랑과 자유를 별개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으며, 경제 발전이나 정치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 속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예를 든다면 사랑이나 자유, 아까 말씀드린 안전감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지같은 것들은 상당히 실체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까 시민 자원 봉사가 뒤떨어진 자원 활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삶의 질이라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의 심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심성으로부터 육성되어야 할 요소이지,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해서, 제도 정치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교육을 통해서 육성되고 다듬어져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의식주 걱정 안하고 사는 것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내재된 불만은 더 많고 대인 관계는 훨씬 더 배말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삶의 질을 위해서 인간 심성의 어떤 부분을 육성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절부터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사회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 발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어떤 삶의 질 요소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의 심성이나 본성으로부터 스스로 개발해

야 될 삶의 질 향유 능력 같은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현송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삶의 질 얘기를 하면 경제 정책 수립가들이나 기업인들은 흔히 “아! 이만큼 성장했으니 복지 투자 많이 하자”, 아직도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길이 많았는데 “이제 그만 나눠먹자”는 얘기나 오해도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고 할 때 분배나 복지 투자를 동일시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도 풀어주시면서 우리 삶의 질 문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현송 박사: 발제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서구에서는 60~70년대 사회 지표 운동이라고 해서 서구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일어남에 따라, 과연 이런 문제를 안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지에 대해 반

성이 일어났고, 그래서 새삼스레 사람들이 선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축정을 해서 그것을 높여보자는 목적에서부터 삶의 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부터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간 대신 삶의 각 영역별 문제점을 접근해보는 식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에 주

위에서 삶의 질을 운운하는 얘기를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단계에서 삶의 질을 자주 거론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황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는 사회 문제가 자꾸 커져감에 따라서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반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는 '1만 달러 시대' 등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목표에 도달했다는 혹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 혹은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소년 문제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은 되겠지만, 삶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수출같은 것으로 다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교통, 환경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영역은 뒤쳐질 때 예컨대, 보건에서 많이 뒤쳐질 경우에 사람들이 "과연 현재 한국이 바람직한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을 '바람직한 삶' 이라고 정의한다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삶일 때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이 낮은 수준에서 맞춰졌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어느 최소 수준

을 넘어섰고 그 이상의 삶의 영역에서 균형이 맞춰졌다면 '질 높은 삶' 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부딪치고 있는 삶은 한 영역에서는 제법 앞서나가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공부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최소 수준(social minimum)이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정부 통계에서도 인정하듯이, 아직도 사회적 최소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즉, 소외된 계층이 아직도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현재 객관적인 수준으로 표시해 놓은 삶의 질과 일상의 감각으로 표시하는 삶의 질과는 많은 격차가 있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께서 경제 성장과 분배 혹은 복지와 의 관계에서 삶의 질이 어떻게 연결될까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은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어떤 지표의 평균적인 점수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배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득 영역의 분배만이 아니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원간의 어느 정도 합의된 수준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고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분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그것은 완전한 의미의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삶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만 경제 성장과 분배는 꼭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경제 성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분배 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고 소외된 계층 혹은 소외된 계층 자녀들의 비행으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난번에 민자당, 국민회의, 자민련 각 정당 대표의 삶의 질에 관한 토론회 원고를 일부러 구해서 보았습니다만, 거기서는 복지 정책과 제도만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자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 개념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분배나 복지의 문제에서도 아직 사회적 최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계층도 많고 공정 분배나 복지제도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분배나 복지 문제가 삶의 질에서 중요하고 강조해야 할 구성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질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전부라는 오해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 윤교수님께서 여기에 보충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로 교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말씀드릴 때대로 삶의 질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경제 성장을 시작할 때는 물론 정부에서

다그친 면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삶의 질 속에는 '물질적인 풍요'라는 개념이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삶의 질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부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물질적 수준의 저하를 감수할 것이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 조사에서 보면 삶의 질 구성 요소에서 물질적 풍요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에서 나타난 표본적인 결과로, 사람들이 그 조사에 응답할 때 물질적 풍요는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고 다른 것들을 중요시한 것이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식 교수: 철학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배부를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의 질을 양적·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쾌락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삶으로 치환해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존 스튜어트 밀은 분명히 수사학적으로 '배고픈 소크라테스'라고 했지만 '배부를 소크라테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 배부르다는 것은 양적인 차원의 물질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넓

은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를 돼지라는 동물로 생각하면 동물적으로 배부를 수 있고, 소크라테스를 가장 높이 성취한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으로서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 결국 삶의 질 논의는 인간답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즉, 배부르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상당히 애매한 질문에 부딪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윤교수님께서 처음에도 얘기하셨지만,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가 어려울 때 접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 앞에서 사회자께서는 우리 사회가 참 힘든 사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들다’라는 것을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체험 방식으로 조금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몇가지로 나눠봤는데, 전부 ‘不’자로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출근에 가지 않아도 불평·불만이 토로되는 곳은 사회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일련의 사회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사회’이며 ‘불신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부징과 비리’

까지 다 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이 한국인의 열악한 삶의 질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현 양식이기는 하지만, 지칭하는 내용이 모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앞에서 문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등 지수하고 관련됩니다. 불평의 예를 들면, “똑같이 일했는데 저사람은 잘 살고 나는 왜 못사는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배 문제나 평등 지표와 상관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나 배분의 질서에 있어서, 균등 분배가 아직도 복지 내지 삶의 질 보장 차원에서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불안한 사회다”라는 것도 역시 문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성 문제인데, 과거에 ‘국가 안전(national security)’을 이야기했던 OECD가 최근에 문제로 삼은 ‘인간의 안전(human security)’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하여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안전 체제 전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편’이라는 것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곳곳에서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나 곳곳에 산재해 있는 ‘행정 불편’에서 오는 무엇인가 불편한 삶입니다. 또 ‘불신’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모든 것과 관련되면서도 전반적인 하나의 분위기 즉, 풍족 분위기와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1차

적으로 삶의 질은 역시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이미 되어있습디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강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의 질에 대한 필요 조건은 역시 불적 토대의 복지제도와 관련되므로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1차적인 선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충분 조건은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용린 교수: 매슬로가 말하는 '욕구 하이여라기'를 보면,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최소한 만족된 상황 하에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에의 부응이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2차적인 욕구인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전 욕구 등을 자기 실현(self actualization)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질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생각됩니다. 또 그 사회가 얼마나 '구성원들의 자기 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삶의 질의 지표로 등장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사회가 상당히 삶의 질이 고양된 사회라고 보았을 때, 일본의 경우 IQ 70인 사람들도 일반 정상인과 어울려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봉급받고 세류내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자는 그런 기본 목표(standard)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 1차적으로 수용

하지는 입장으로 보호 기관에 수용해서 이 사람들이 인권과 품위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미국이 장애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일본적인 것도, 미국적인 것도 아닌 방향조차 없습니다. 지금 IQ가 70 이하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적응시켜야 될 것이냐 할 때, 그것을 단순한 복지 문제로 얘기하면 시설이나 지으면 그만이겠지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국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같은 복지를 하더라도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실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현대 부인들은 아이만 나오면 벌쩍하게 가지고 있던 직장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즉, 여성이 상당한 잠재 능력(potentiality)이 있더라도 사회가 그것을 지원하지 못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기회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육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문제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때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이 3~4년 동안 기회를 놓쳐버리면, 대학 진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대학과 떨어져 있다가도 언제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추상적인 놀음에 빠지기보다는 몇 개의 영역 가운데서 인간의 잠재 능력을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이 보유한 자기의 어떤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는 GNP의 5%를 교육 예산으로 하여 예산이 지금보다 2~3 배 늘어난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독특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관심이 쏟아져야 되는 문제이지, 그냥 제도 상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도 삶의 질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것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상당히 개념적인 문제도 좀 해결된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바랍직하고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해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물적 토대는 높아져야 되고, 아직 소극적인 수준이지만 '不'자로 시작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해결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모든 개인이 자기 실현을 해나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등 포괄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또 자연스럽게 문교수님께서 구체적인 과제로 조금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교육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모든 개인이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그런 형태의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전환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윤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보면 교육, 환경, 복지, 기업 참여가 있는데, 이것을 각 분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실 적합성을 갖는 문제로서 꼭 강조되어야 할 문제들, 정책적인 과제들을 자기 분야에서 짚어주는 순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전 교수: 윤교수님께서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의 양태가 계속되고 경제 개발이 계속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은 점점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각 시민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창한 삼림으로 뒤덮힌 산들을 파헤치고 관광 단지를 개발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연적 환경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가 환경 정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진 외국들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모인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국제회의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이 제창되었습니다.

이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대안 혹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고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의 주제는 삶의 질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직결되는 사항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의 연속선 상에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제 성장 그 자체가 우리 각 개인에게 다양하고 섬세한 느낌과 풍부한 체험 그리고 다양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삶의 질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는 삶의 질이란 아까 문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욕구 지표와 주로 관련된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하지 않고 얻는 삶의 질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삶의 질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

다. 예컨대,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다양한 생물 등 자연 환경에 몰입했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희열이나 깊은 체험이 우리의 삶을 또한 풍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윤교수님이나 황교수님의 환경에 대한 좋은 말씀이나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의 질에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경제 성장은 우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경제 성장의 그런 욕구 충족 과정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켈브레이스 교수는 이런 효과를 의존 효과라고 불렀습니다만,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욕구는 양적으로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섬세해지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의 주의에서 늘 보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다양해지고 섬세해지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섬세한 상품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지만,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해지고 섬세해지는 우리 인간의 욕구 충족은 우리의 환경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복의 종류가 전반적으로 다양화·고급화되는 가운데 다양하고 섬세한 가죽 제품이나 모피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다보니,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

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 많은 농·식물들이 멸종됐거나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범지구적으로 제기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을 놓고 선진국 진영과 후진국 진영 사이의 갈등 그리고 선진국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죽 제품이나 모피 제품의 생산은 비단 생물 다양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조 과정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은 강과 바다 그리고 우리의 식수원을 지독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가죽 제품이나 모피 제품에 대한 광고가 대중 매체에 범람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죽 제품 및 모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현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의 질이 하락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 이 두 현상이 크게 대조를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이를 줄여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은 자연 환경이 우리 인류를 수용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우리의 활동 특히, 경제적인 활동은 결국 우리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소비는 우리의 각종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의 이

념은 우리 인류의 현 소비 수준이나 소비 양태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본주의가 정착된 이래 우리 인간의 욕망은 부조건 충족되어야 할 대상 즉, 목적의 위치에 올려졌고 우리의 이성만 오직 이 욕망을 최대한 잘 추구하기 위한 길잡이의 위치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인류의 소비 양태를 통제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지속 가능 발전'의 이념은 극히 회의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비 양태, 우리 인류의 소비 양태부터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이념의 첫번째 주문입니다.

황경식 교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욕구를 다양화·다면화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 토대 즉, 경제 수준에 비례해서 높아져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소득이 반드시 더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질적인 토대나 복지는 삶의 질과 관련된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삶의 질은 주체적인 문제와 상

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수님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저 나름대로 정리하면, 복지제도 등은 기본이고 삶의 질의 충분 조건은 삶을 향유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의식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삶을 누리는 자가 훨씬 더 풍요한 삶의 질을 향유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비교해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 그것이 비례한다면 우리에게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기분 좋은 소리로 '서양의 물질 문명, 동양의 정신 문화' 라고 말하는 이유도 삶의 질이 물질 토대와 정신 문화가 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 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 라는 말을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삶의 질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문화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다원화·다양화시키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음악회, 연극, 좋은 영화 등이 많아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 친구들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도 불만한 영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화 정책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면, 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국가 정책적이든 시민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간에 다양화·다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교수님께서도 주제 발표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은 삶의 질과 관련해서 건강이나 친구는 많이 문제 삼는데

자유 시간, 레저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른들이 향유할 어떤 놀이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방이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다원화를 위해 좀 기여했다고 보지만, 여전히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있어서 가는 곳이 고작 술집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놀이(고스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 문화'가 좀 다양화·다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문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음악회를 개최해서 후자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이 음악회 개최하는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에서 얻게 되는 초청장으로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친분 관계때문에 가는 것이지 베토벤의 교향곡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그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육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학교 교육은 완전히 입시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삶의 질에 가장 배반되는 것이 '지옥'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삶의 질이 쉼(제로)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교통 지옥과 입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을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자질

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만 음악회에 가서 그것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또 연극같은 것도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바로는 미혼 여성들만을 위한 놀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 공연장에 가 보면 80~90%가 미혼 여성들로 남성은 극히 적고 특히, 30대 이후 남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교육이 문화에 대한 맹아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질의 교양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 개혁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적어도 우리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시민으로 기르는 교육 체제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정로 교수: 대학에 계시니까 인재 교육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려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한국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고 보장된 지역 사회입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라는 존재때문에 저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반 이상이 지역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구의 반 정도가 서울을 지향해서 살기 때문이며, 따라서 서울 사람들은 “서울 이외에도 지역이 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10년 동안 벗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편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은 서울을 수시로 드나들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 삶의 질을 더 높이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이후의 사람들이 음악회나 연극도 안 가고, 소설도 안 읽는 것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의 개발과 배양이 안된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일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이라는 것이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기업이 삶의 질 실현에 기여하는 데 가장 새로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 활동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활동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관심을 기울여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여가 시간까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용린 교수: 저도 가와사키(川崎)시에 여러번 갔습니다. 가와사끼市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는데 좋게 변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을 의식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와사끼 시민관에 가서도 느낀 것은, 일본 사회 어디서든 한국 사람들이 천대를 받는데, 가와사끼에서는 천대를 안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제일 동포들을 만나봐

도 “다른 데 어디보다도 가와사키에서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한쪽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와서 도와줍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심성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남한테 빼 끼치지 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일본 사람들이 국민학교 6년, 중학교까지 도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르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학교에서나 어른들이 “나는 남에게 빼 끼치지 말고,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남한테 빼 끼치면 안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일본 사람들에게 깔린 기본적인 심성이라는 것이 수상,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기보다는 “너 잘났으니 너 잘난 대로 살아라”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댕겨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있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는 우리 삶의 질 문제도 여러 가지 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아야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문제, 가정에서의 교육 문제 등에서부터 가닥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역 분체가 삶의 질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할 하는데, 우리 사회에 지역 개념이 없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공동체가 없어지자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

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행정 구역은 있어도 한 동네,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개선해서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의식과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들은 주로 교회를 많이 갑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서로 주고 받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가면 집안의 무슨 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누가 돌아가셨을 때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농촌에서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없어졌으니까 교회에 가면 그래도 서로 돕고 의논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잘 안 가는 중산층들의 경우는 개인적인 연줄만 가지고 공동체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봅니다. 즉, 현연, 지연, 학연, 직연같은 것으로 공동체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상을 당한 집에 가보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문상도 안 오고, 오는 사람은 직장 사람들, 친척들, 학교 친구들입니다. 그것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좋게 말해서 초공간적인 개인 네트워크에 의한 擬似 共同體(pseudo community)로서 그러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네 일에 관심을 가졌다가는 돈이나 내라 하고 자기 시간을 뺏기니까 부인만 딱딱히 내보내게 됩니다. 일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이 삶의 질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저도 KBS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스키장을 처음 개발할 때의 내용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지방정부가 모든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해주고, 지방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스키장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스키장 개발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은행에서 융자받아 조그마한 여관이나 식당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깨끗하고 알뜰하게 경영하니까 식당이고 여관이고 스키장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되어 식당도 커지고 여관도 커져 호텔이 되는 등 그 지역에 옛날부터 살던 가난했던 농민들이 스키장의 개발로 땅 팔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아니라도 웬만큼 다 잘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녀들이 도시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호텔이나 여관을 경영하고, 공무원도 되고, 은행원도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개발, 사회 개발, 지역 개발한다고 하면 뭐든지 대기업이 와서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서울이 모두 해주고, 정부가 다 해주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공동체 문제와 연결됩니다. 사람은 사실 공동체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감을 못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모두 답을 높이고 철조망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것은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경제적 풍요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환경 문제가 좀 간단히 넘어갔습니다만 욕구가 다양하게, 보다 많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많이 소비되고 낭비될 수 있고 환경 파괴까지 이어진다 했을 때,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는 욕구 체제 자체를 사람의 가치관이나 교육을 통해, 반드시 물질적 소비가 많은 것이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국내에서 계층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후진국들에게 그만 성장하라고 하면 “너희들은 포카관에서 돈 따고 나가면서 그만 하자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요즈음 환경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속에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의 권리, 또 자원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해주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선진국과 제3세계가 서로 협조해가면서 소위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모두가 살려,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밖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된 환경 문제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경이라는 것이 삶의 질과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

니다. 이것 역시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송 박사님께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이현송 박사: 앞에서 삶의 질과 분배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표에서부터 생각을 끌어내볼까 합니다. 한국의 40대 즉, 40~44 세 범주의 남성 사망률이 우리의 소득 수준과 비슷한 나라의 3 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 3 배라는 수치는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그렇게 일찍 죽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한창 활동할 나이에 있는 그들이 능력에 비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죽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직장인들이 40대의 한창 활동할 시기에 그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해서 결국 쓰러진다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40대 남성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삶의 질의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자기 실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인적 자본'의 교육 투자 면에서는 상당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된 교육 자원을 사회에서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사회가 기회를 상당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쓰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여름 UNDP에서 여성 평등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여성 평등 지수에서 113 개국 중 9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 밑에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지역의 아주 극도로 가난한 나라 아니면 회교국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이 사회 참여 면에서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배제된 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배제되지 않은 층의 사회적 부담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양쪽 삶의 질을 이중적으로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야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정년이 55 세쯤인데, 실제로 55 세에 끝마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개 40대 말쯤되면 나가서 자영 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여튼 50대 초반쯤 되면 벌써 일에서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0 세를 넘어서고 있는데 10~20 년을 무위도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활동에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이 한국도 벌써 60 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고, 특별히 큰 긴장을 요하지 않는 생산 활동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는 연령이 60 몇세까지 되에도 불구하고, 한 10 년 정도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위 중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선진국이나 우리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회가

투자한 인적 자원 가운데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생산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층이 매우 적고, 그 사람이 사회 다른 부분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부양받는 사람은 부양받는 대로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인정받고, 참여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자기의 지위같은 것을 형성하는데, 그런 것에서 배제되는 여성이나 중고령자는 불행해지고, 또 포함되는 사람은 부양의 의무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됩니다.

한국에서 공동체가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한참 활동하고 조직해야 할 부분 즉,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로써 삶의 에너지를 분배할 수 없는 현상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돈으로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쳐져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회에 고루 참여함으로써 부담을 고르게 하고 만족도 고루 얻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윤정로 교수님께서 일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40대의 사망률이 높은 것과 관련됩니다. 한국의 대표적 사회인인 대기업 사원을 예로 들면, 중소기업의 사원도 똑같은 입장인 하지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무척 받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루 24 시간 중에서 9 시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는데, 거기서 일을 통한 성취도라든지 만족도 혹은 일에 대한 자기의 통제를 통한 성취

감같은 것을 누릴 기회를 일의 영역에서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쫓기는 생활을 하기 쉽고, 서구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 일의 한 영역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느낌이 그 일의 다른 영역, 대표적으로 가족의 영역에 'spill over effect' 라는 여파를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아이들과 부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기의 여가를 조직하는 태도인데, 그것이 자기 통제 능력이 가장 강한 전문 직업인 경우에는 집에 올 때도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것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의의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비해서, 하루 종일 일에서 쫓기고 통제만 받다가 집에 오면 아이들과 부인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자기의 여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전 교수: 아까 사회자께서 성장제일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요청하셨으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경제 성장 그 자체보다도 경제 성장의 속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경제 성장은 그만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으며 또한 지방에서 지

역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윤교수님께서는 서울과 지방의 큰 격차에 대하여 불평하셨고, 이현송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말씀해주신 현상이 각각 독자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어떤 하나의 큰 흐름과 연결되면서 서로 같은 맥락을 이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현상이란 다름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우리도 선진국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하자라는 국민적 열망입니다. 환경 파괴도 염두에 두고 계층과 위함감도 삭이고 지역간 불균형도 시정하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눈치볼 것 없이 무조건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고보자는 식의 열망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제 성장은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졸속 경제 성장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어리는 좁고 부존 자연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의 경우에는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최대한 동원해서 수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빠른 경제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소위 규모의 경제나 집적의 경제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한 거점 개발이 경제 성장 전략의 일부로 채택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타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

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의 쓸만한 노동력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점 지역으로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뽑아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갈 인물이 바닥나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값싼 노동력 하나를 밑천으로 해외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까닭에 모든 근로자들이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특히,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40대 남성에게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교수님께서는 지방이 낙후되었고 수도권에 모든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손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부도 수도권에의 집중 현상이나 수도권의 기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매우 오래 전부터 애를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못했느냐 하면 아마도 그것은 역부족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향한 자동적 행진이 멈추어지지 않는 한 수도권 집중이 멈춰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한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독한 환경 오염도 바로 그런 졸속 경제 성장의 탓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하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게 듭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생산비가 저렴해야 하는데 환경 오염 물질을 마구 배출하는 것이 생산비를 저렴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신장 그리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은 우리의 우수한 노동력과 우리의 환경을 값싸게 이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층간 빈부의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의 문제도 우리의 줄속 경제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계 숫자 예컨대, 지니계수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외국에 비해서 그리 심한 편은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빠른 경제 성장은 흔히 심한 빈부의 격차를 수반하기 마련인데, 그동안 세계적인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인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통계 상으로는 그리 심하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빈부의 격차를 심하게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때문일 것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 역시 빠른 경제 성장에 의해서 조장되기도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결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중에 얘기 못한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결론짓는 말씀을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교수: 우리 사회에서 남녀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 속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평등하고 집안에 있기 때문에 덜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0 위라는 것을 반드시 믿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40대의 사망률이 높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 대상이 된 소위 40대의 한국 사람들은 기초 영양 부실의 세대입니다. 즉, 6 25가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적빈의 상태에 있을 때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초 영양 부실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트레스 문제인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술 마시는 것 내지는 고스톱하는 것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를 스포츠로 해소하려고 해도 40대 초반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의 예를 들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환경 문제는 국내적으로 보면 일단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또 대기업이 환경 문제의 주범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일차적으로 부담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담을 강하게 지우되 견제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민 단체의 강력한 조직과 압력이 요구됩니다.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시민 단체의 강력한 힘, 국제적으로는 상당한 권위를 갖는 UN과 같은 국제 기구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문용린 교수: 40대의 사망률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40대에게 가장 부거운 짐을 얹어놓고 있는 지금, 기초 영양의 부실보다도 40대의 업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과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망률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삶의 질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아들 문제, 입양아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양식 개념인 입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입양이라는 문화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또 10대 소년 소녀 가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10세와 7세의 오누이가 있을 때 그 둘을 어떤 고아원으로 나눠 보내는 것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서양은 오누이를 나눠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둘이서 밥을 해먹으면서 살더라도 한 가족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문화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도 지금 40~50대의 여가 문화가 과거에는 기생방, 사랑방이었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한참 방황하다가 고스톱으로, 요즘에는 노래방 문화로 안착되어갑니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삶의 질이라는 것을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생산한 말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것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나름대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이제 국민적인 합의로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질 논의에 있어서 상당

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전 교수: 이제까지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요소들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문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욕구 지표의 내용이 되는 요소들, 이 요소들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상품의 다양화·섬세화·고급화를 통해서 달성되는 욕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지표에 관련된 요소들은 주로 사회 통합 차원의 인간 관계에 관련된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교수님이 주제 발표에서 강조하셨고 또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요소들, 대략 이런 세부류의 요소들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 두번째 부류와 세번째 부류 즉, 사회 통합에 관련된 요소들과 환경의 질과 연결된 요소들의 비중이 욕구 지표와 관련된 요소들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욕구 지표와 관련된 요소들은 다른 부류에 속하는 요소들과 상당한 정도의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 지표와 관련된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욕구 지표의 상승은 환경의 질을 통한 삶의 질에 있어서 하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욕구 지표와 통합 지표만 보아서는 삶의 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삶의 질에 대

한 지표를 작성할 때는 이상에서 정리한 세 가지 부류의 요소들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욕구 지표와 관련된 요소들과 환경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을 때는, 과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욕구 지표와 관련된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환경이 허용하는 수준 이하로 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욕망의 질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고 아우성입니다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지구는 공중 분해되어서 우리 인류는 종말을 맞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성을 찾아서 이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예컨대, 12억 인구의 중국이 가구당 자동차 한 두 대씩, 텔레비전도 두 대씩, 냉장고도 한 두 대씩, 전화도 서너 대씩 가지게 되는 등 지금의 미국처럼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는 자연 자원 그리고 이의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은 지구의 자연적 한계를 훨씬 초과하는 탓에 지구는 도저히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섬세화·고급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

느 정도 수준으로 제동을 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가의 문제가 실로 어려운 과제요, 인류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종래와 같이 대기 오염의 물질, 수질 오염 물질, 쓰레기 등 환경 오염 매체별 통제나 기업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주인 대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구와 소비 양태를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발상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 전환은 곧 우리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부 격차의 문제와 환경 문제 사이의 연결 고리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빈부 격차의 문제와 환경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 격차는 그 자체로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지만, 빈부 격차는 환경 문제와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그러나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선, 환경 오염은 빈부 격차를 실질적으로 더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될 경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천이 오염되면 부자는 생수를 사먹으면 그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빈부 격차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들으로써 환경 파괴를 영속화시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한, 정부는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경제 성장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환경 파괴

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층간 위화감을 불식시킴으로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리고 환경의 질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빈부 격차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현송 박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환경 문제때문이 아니라 모피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가 모피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삶의 만족감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라는 소위 과시적인 비교 잣대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식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과시적인 비교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실현하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이다”라는 인식 전환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성 세대가 단시일에 고칠 것은 아니고, 최소한 다음 세대가 삶의 가치나 목표, 질 높은 삶이 무엇인가를 ‘비교’가 아닌 ‘실현’에 들 수 있게 하려는 사회적인 각성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삶의 다양한 영역간에 아주 큰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의 문제가 제일 앞서고 있긴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소득이 높아감에 따라 ‘시간 지체 현상’이 일어나서 다른 영역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다른 영역도 골고루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의 소외된 층이 존재하는 한, 그 사회 전반적인 복지 등 삶의 질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요즘 예방적인 복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소외 계층이 존재하는 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2 배, 3 배의 고통덩이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자각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을 축으로 하면서 이런 몇가지 중요한 점에 대한 각성을 하기 보다는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현시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식의 전환이 정책 담당자와 세대간에도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경제 성장을 정말 보람되고 바람직한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로 교수: 처음에 삶의 질이라는 개념 정립이 안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삶의 질에 대한 정교한 개념화라는 것이 사회학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사회 구성원들간에 공유

되어 있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조건과 심성적인 조건까지 포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 설문 조사에서도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객관적인 지표만 달성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상당히 사회학의 실증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치라든가 객관화라든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규정적이고, 상황 규정적인 삶의 질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진지하고 솔직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그냥 아주 당연하게 “이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소위 ‘선진국’의 관행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사회적 최저 수준(social minimum)’ 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 최저 수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가변적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히, 지식인층이 상당히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만이 진지한 논의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아주 좋은 좌담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의 개념도 서로 교육적이었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수님께서 ‘배부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시다만, 하여튼 인간은 원래가 생물학적 동물인 동시에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문화적, 창조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에서 시작해서 자기 실현의 욕구, 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보다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삶까지도 영위할 수 있는 폭 넓은 삶의 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은 자기 지역을 더 좋은 지역 사회로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 활동, 사회 운동, 그리고 시민 운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일의 구조라든지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위 주체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와 동시에 삶의 질 개념을 한국 실정과 문화에 적합한 개념으로 접근시켜야 하고, 우리 기성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윤정로 교수님에게 특히 감사드리고, 토론회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